



탄핵 결정때까지...다시 타오른 촛불
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6만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헌재 조속 결정으로 국정공백 줄여라

박대통령 탄핵 가결 후 전국 104만명 7차 촛불 집회

황 권한대행 여야정협의체 공감...조만간 출범할 듯

민생·경제 안정 촉구...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관련기사 2·3·4·5·6·7·14면
지난 9일 국회가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업무 정지에 따라 여·야·정 협의를 모아 민생·경제·외교·안보 분야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야권은 탄핵안에 대한 현재의 조속한 인용 결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탄핵안 처리 직후 열린 첫 주말 촛불집회에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100만여명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

선만큼,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해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정정상화와 헌정 회복을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조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촛불 민심에 따라 헌재는 6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민생모드’로 전환,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탄핵 정국 수습에 나선다. 당장,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임시 비상체제’인 황교안 대

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당면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고 주요 국가 과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야 3당 사이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회동을 해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 및 국정안정을 위한 상임위 활동과 함께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개헌특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경제·외교·안보·민생 등의 문제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민생 경제 해결 등을 위해 임종룡 후보자를 포함한 경제부총리 임명을 민주당에 백지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9일 박 대

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우선 경제분야 여야정 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탄핵안 통과와 관련,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개혁 과제로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재벌개혁, 권력기관 개조 등을 내세우며 우선 청산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지속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 수습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헌재 탄핵안 본격 심리 착수

9일 국회 찬성 234표, 반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지난 주말과 휴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국했다가 지난 10일 서둘러 귀국한 즉시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출근했던 강 재판관은 11일 오전 11시 10분께 다시 헌재로 나와 기록을 들여다봤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 새누리당(129석)에서도 절반 가까운 최소 6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30여명이 탄핵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는 9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직후 표결에 들어가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국회는 또 등분을 청와대에도 전달했으며 박 대통령은 등분을 받은 이날 오후 7시 3분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빨라진 대선...바빠진 대선주자들

헌재 심판 속도 따라 3월, 4월, 8월 대선 판가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차기 대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질 수도 있으나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확정적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만 남아있다.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이 권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8조 2항의 규정 때문이다. 헌재가 심판에 속도를 내서 더불어민주당 요구처럼 1월말까지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뿔뿔이' 피기 시작하는 3월말에 치

러지게 된다. 2월에 결정을 내려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심판 기간이 가장 18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이유로 6월중 결정을 내리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찜통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현재의 기각 결정까지 64일이 걸렸다. 박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제기했던 탄핵사유가 노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은 더 걸린다는 관측도 있다. 또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지속하면 현재의 탄핵심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최악의 경우 탄핵심판에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탄핵 가결’ 9일자 호외 4개면 발행 ▶5면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오매! 광주, 참 좋아요

활기차서 좋아요
미래 활력

자랑해도 좋아요
광주로 오세요!

광주에서 좋아요
민주 인권 평화

깨끗해서 좋아요
청결

함께하면 좋아요
배려 포용

● 나눔·봉사 실천하기
● 어린이·청소년 격려하기

● 광주 맛·명소 자랑하기
● 친구, 광주 초대하기

● 광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 생활 속 인권 실천하기

● 나부터 질서·청결 참여하기
●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하기

●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 이웃간 배려와 칭찬하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